

2008 국제학술회의

## 환황해 협력의 의의와 추진 방향

-지방자치단체협력협의체 구성과 문제점-

전 가 림  
(호서대학교)

# 환황해 협력의 의의와 추진 방향

## -지방자치단체협력협의체 구성과 문제점-

전가림(호서대학교)

### I. 서론

오늘날 세계는 국민국가(Nation States)들 간의 상호연관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면서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단위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한편으로 EU, NATFA, APEC, MERCOSUR 등과 같은 지역주의 형태의 초국가주의의 대두와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 동태를 보이고 있다.<sup>1)</sup> 하지만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세계화의 과정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냉전 이후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심화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무역, 금융, 투자 등 부문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무역에 있어 7년여의 각종 협상 끝에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WTO체제가 탄생하였고, 세계경제는 WTO에 의해 국가간 상호의존관계가 조정되게 되었다. 새로운 체제의 등장은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수출입뿐만 아니라, 무역과 관련한 국내 생산조건까지도 규범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일반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문제, 노동조건, 경쟁정책 등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과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 역시 9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실 이러한 세계

---

1)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21 Century*, Random House, 1993. 참조.

화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서로 상반된 것은 아니다.<sup>2)</sup> GATT의 24조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반드시 상충적인 것은 아니며, 지역주의가 오히려 다자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일련의 행동을 지칭하며, 이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라 할 수 있다.<sup>3)</sup>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대부분 지역무역협정(RTA)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발효 중인 205개의 지역협정을<sup>4)</sup>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에 5개, 70년대 이후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들어서면서 64개로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114개가 체결되어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특히 WTO체제의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의 움직임은 동북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데탕트(detente) 무드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주제에 부합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냉전적 대립이 상존하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 평화와 발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그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협력 논의는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의 상이성과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및 사회문화(역사)적 갈등 등의 각종 요인으로 인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6)</sup>

2) Kenneth W. Dam, *The GAT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200.

3) Stephan Haggard, "Comment," in Jeffrey A. Frankel and Miles Kahler, *Regionalism and Rivalr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Pacific Asi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 48~49.

4) WTO(<http://www.wto.org>).

5)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중국에서도 한·중 FTA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王濤, 孟小艷, 中韓自由貿易區的可能性與障礙分析, 『哈爾濱商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2期 總第93期, p. 94, 116; 李淑娟, 論區域經濟一體化背景下的中韓合作, 『當代韓國』 2005年 春季號, pp. 28~30.

6) 王勇, “東亞共同體”: 地區與國家的觀點, 『外交評論』 2005年 8月 總第83期, pp. 19~20; 田中青, 試論“東亞共同體”, 『當代亞太』 2004年 第10期, pp. 16~17.

심지어는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장기적 목표나 경제통합의 가능성 및 경제통합의 방식에 대해서조차 역내 국가들 상호간에 최소한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실현될 경우 이 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적 효율과 성장은 물론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 지역협력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역내협력의 논의는 국가 간 협력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점차 거점지역별 협력이란 미시적 차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가고 있다. 이는 협력의 용이성과 현실적 필요성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전의 여러 논의와 방안 중에서도 비교적 실현 가능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환황해권 지역협력이다.

환황해 지역협력의 범위는 황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 간의 지역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황해 지역협력의 논의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은 국가 단위체 간의 상호 협력이라 차원보다는 다소 협소한 지역협력체의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력의 용이성과 현실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환황해 지역협력의 논의가 차후 상당한 진전을 이룸으로써 거점지역별 협력의 논의가 보다 광범위한 협력의 논의로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본고의 한국과 중국의 거점지역별 협력을 기본 전제로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환황해 지역협력은 한·중 수교 이후, 날로 증대되어 가는 양국 간의 경제적 긴밀도와 무관하지 않다. 1992년 수교 당해 연도 양국의 무역총액은 64.7억 달러였으나, 2007년 1599억 달러로 무려 25배의 증가를 보였다.<sup>7)</sup> 1998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2005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국이 되었다.

1993년 중국의 제 7대 무역국이었던 한국은 2003년부터 제 3의 무역국(홍콩과 EU제외)이 되었다는 사실은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김영삼 정부 당시 우호협력관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협력동반자관계, 노무현 정부의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환황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 지역에 있어 지역협력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 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환황해 지역협력의 등

7) 『매일경제신문』, 2008년 1월 14일.

장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황해 지역의 경제교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통해 그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논의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본문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경제교류의 내용은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류’를 중심으로 논하려 한다. 끝으로 환황해 지역협력의 실현을 위해 역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에 대한 합리적 선택과 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의 발전 과정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적잖은 전문가들에 의해 진해되어 왔다.<sup>8)</sup> 그러나 이 지역에 있어 역사적 문제와 지정학적 영향력은 아직까지 긴장과 반목이란 냉전적 환경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 직접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논의가 20여년의 시간동안 논의되어 오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급속한 경제 발전 및 국제적 위상의 제고는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역할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세계화와 지역주의란 시대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논의는 역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한·중·일 3국 중심의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이 있다.

2007년 현재, 한·중·일 3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20,045달러, 2,461달러, 34,312달러이며, 외환보유액은 2,622억 달러, 15,282억 달러, 9,734억 달러이다.<sup>9)</sup> 3국의 무역총액은 2006년 현재, 한국은 수출 3,254억 달러, 수입 3,093억 달러, 중국은 수출 9,693억 달러, 수입은 7,916억 달러, 일본은 수출 6,499억 달러, 수입 5,795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sup>10)</sup> 현존 최대의 지역협

8) 전가람, "냉전 후 동북아 지역협력 연구—중, 일, 한 삼국을 중심으로 (冷戰後東北亞區域合作研究以中,日,韓三國爲中心)", 베이징대학 국제관계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4~5.

9) 한국자료는 한국은행(<http://www.bok.or.kr>), 중국자료는 중국인민은행(<http://www.pbc.gov.cn/>) 통계계보 각 년도, 일본자료는 일본은행(<http://www.boj.or.jp/>),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의 각 년도 자료 참조.

10) IMF(<http://www.imf.org>),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참조.

력체인 EU 27개 회원국의 2006년 총수출액은 21,420억 달러이며 총수입액은 21,644억 달러임을 감안하더라도,<sup>11)</sup> 경제의 총량적인 측면에서 3국의 경제력은 다른 어떤 지역경제협력체에 뒤지지 않고 있다([그림-1] 참조).

하지만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체의 논의는 해당 국가들의 원칙적인 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가간의 체제문제와 경제발전 정도 등의 높은 상이성 그리고 매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다만 협력에 대한 논의와 관계된 교류와 연구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이며 다변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보다 가시적인 성과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역협력의 논의는 국가 행위자의 차원에서 점차 거점지역별 협력이라는 지방 정부 간의 협력으로 그 방향과 내용이 전이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 할 수 있다.

사실 동북아지역의 역내 경제협력 강화의 학술적 논의는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일본의 니이가카(新潟)에서 열린 “환일본해 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의 효시라 할 수 있는데 이 회의 이후 국제사회에 있어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 구소련이 해체되었고, 한·중 수교가 이뤄졌으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역내 정세가 전반적으로 역내협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흘렀다. 물론 북한의 정책 향배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기는 했지만, 미·북 무역대표부 상호개설의 움직임 및 한반도 에너지기구(KEDO)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북한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11) 역내교역 제외, IMF(<http://www.imf.org>)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Monthly Bulletin 자료 참조.

[그림-1] 한·중·일 3국의 수출입 동향



주: 1. 무역(수출) : 통관기준(FOB); 2. 무역(수입) : 통관기준(CIF)

출처 : 국제금융통계월보(국제통화기금)

또한 역내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가 적어도 경제협력의 분야에 있어 종전보다 매우 긴밀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역외국가와의 깊은 상호의존도를 미뤄볼 때, 역내 경제권의 형성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지만 지역협력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히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중 관계의 진전과 남북한 교류의 증가 및 북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실질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테올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의 논의는 동서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중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비한 자구적이고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방향이 선행되면서 정치적 논의는 점차 경제적 논의로 이행되었다. 더욱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결과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협력의 개방성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협력을 기저로 출발한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에 따른 참여 당사국의 배타적 이익에 관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인해 지역협력의 논의는 점차 실현 가능한 소지역에서의 협력 논의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논의와 환황해(발해) 지역협력의 논의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를 시계열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냉전 종식 후,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구소련이 몰락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적잖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중국에서도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몽고는 체제변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사회체제에 적응하려 부단히 노력한데 반해 북한은 ‘주체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립주의의 길을 선택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은 기존의 국가들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요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변화에 따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부여받았고 이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유지와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편입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유지를 통해 적응의 길을 택했으며, 러시아는 급진적인 체제변화를, 이에 반해 몽골은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그리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고립의 길을 선택하였다.

90년대 초반, 동북아 지역협력의 논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한 적응 혹은 체제유지를 위한 고립이라는 선택의 문제로 그 특징이 나뉜다. 전자를 택한 중국과 몽고 그리고 러시아는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후 비교적 순탄한 변화를 맞이했고, 후자를 선택한 북한은 대립과 갈등을 통한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경제적 곤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핵이란 극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역내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협력의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북아 지역협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중후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하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 3개 접경국가 및 한국 몽골 등 5개국이 뉴욕에서 국제협정에 서명함으로써 TRADP가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사하공화국(Yakut)의 천연가스를 개발한 후 한국에 운송하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역내교역 증가를 위한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사업이 활발하게 검토되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APEC에 대한 느슨한 기대가 점차 현실성을 상실하면서 환황해(발해만) 6개 도시의 역내 경제협력과 관련한 한·중·일 3국간의 6개 도시 협의체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2)</sup>



특히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의 환황해 지역협력 논의가 주목 받는 점으로는 200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 11차 5개년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sup>12)</sup> 성장방식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계획은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새로운 경제운영 정책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조화사회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특화 전략으로서 서부대개발과 연안지역의 경제 및 산업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은 일종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의도한 조치로 그 대상지역으로는 환발해지역(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으로 구성된 京津冀지역)과 동북 3성(흑룡강성, 랴오닝성, 지린성), 장강삼각주지역(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성유지역(스촨성과 충칭(重慶))이 있다. 그 중 성유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환황해에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들 지역이 중앙정부의 경제운영에 있어 주요 거점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환황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논의가 재차 부각되는 주요 이유는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여러 논의들이 지역협력을 위한 각종 방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적실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에서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으로 그 논의의 범위가 이전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역내 협력의 논의가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일본의 대외적 행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협력에 있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 일본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써 역내 다자간 협상에서 보다 양자 간 협상에 의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략적 차원에서 역내 협력체의 구성에 외관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역내 협력의 강화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역내 지역협력체를 주도할 경우 대두되는 대국관계의 설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매성 등이 일본으로 하여금 지역협력의 논의에 있어 소극성을 띄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12) 일본의 北九州市, 下關市, 한국의 仁川市, 釜山市, 중국의 大連市, 青島市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991년 제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3) 전가람, 후진타오체제의 정치·경제·외교적 특징, 『동서연구』 제 18권 2호, pp. 69~71.

### III. 환황해 지역협력의 현황: 물류를 중심으로

환황해 지역협력의 논의 자체가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로는 역내 구성 국가들의 정책기조가 대체로 평화와 발전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지리·역사·문화적 인접성이 다른 지역협력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과 경제적 보안성은 이 지역의 장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상호간 이미 상당정도의 성숙되었다는 점은 환황해 지역협력의 긍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는 정치정세의 불안정성, 경제자립기반의 취약성, 시장규모의 협소성 및 낮은 기술 자립도와 자본력 그리고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의 문제들이 제약요인으로 평가된다.<sup>14)</sup>

사실 환황해 지역협력의 논의가 최근 대두되고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 11차 5개년 계획이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논한 환황해 지역협력의 결정요인과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 5회 전체회의(이하 16기 5중전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제 11차 5개년 계획(規劃)안을 채택했다.<sup>15)</sup> 이번 계획은 향후 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받았다.

이번 계획의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우선 ‘계획(計劃, plan)’이란 용어를 ‘규획(規劃, program)’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어의 사전적 의미로 계획은 한정된 시공간적 환경 하에서 강제적인 의무가 강조되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계획은 계획된 기간 내에 반드시 계획안에서 제시된 일체의 내용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규획은 시공간적 제한이 다소 느슨한 형태로 한정되고 강제적 의무가 강조되기 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보다 수렴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14) 이와 관련해 중국의 馮昭奎 교수는 주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협력공동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馮昭奎, 建設東亞共同體의十大關鍵要素, 『外交評論』 2005年 8月 總第 83期, pp. 9~13.

15) 이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단순히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계획경제의 정책운영이라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보다 시장화된 경제운용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 것이다. 즉 11차 5개년 계획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시정 및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계획안들과는 구별되고 있다.

성장측면에 있어서는 ‘안정적(平穩) 성장’에 근거한 ‘고속성장(快速成長)’을 그리고 분배에 있어서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12월 23일 대한상의회에서 개최된 『중국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거시경제연구부 루중웬(盧中原) 부장은 “11·5기간 중 중국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기술혁신과 제도혁신, 인적자원의 고도화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하여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이번 계획이 그간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제 4세대 지도부가 제시한 신 계획안은 경제성장의 내용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적 혜택 등에 있어 ‘조화로운 사회’, ‘인본주의(以人爲本)의 견지를 통한 발전관의 전환’,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 ‘질적 제고’ 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이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의 조기 실현의도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6)</sup>

신 지도부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발전 계획의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안정적인 고도성장’- 합리적 수준에서의 투자 통제와 소비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국내 총수요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술수준의 제고, 서비스업의 발전 추진과 SOC의 확대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것이다<sup>17)</sup>; ②‘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자원절약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정하며 동시

16) 11차 5개년 계획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 중 소강단계에 해당한다. 원바오(溫飽)단계-1979~1999년, 2000년의 GDP가 1980년의 4배; 샤오캉(小康)단계-2000~2020년, 2020년의 GDP가 2000년의 4배, 1인당 GDP가 3000달러; 따통(大同)단계-2020~2050년, 신진국으로의 진입.

17) 2005년 12월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한중국대사관, 대한상의회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란 세미나에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산업경제연구실 양젠룽(楊建龍) 주임은 “향후 중국산업의 발전에는 ‘소비구조의 고도화’

에 환경친화적 경제, 사회를 이룩하여 이를 순환경제의 발전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③‘자주적 혁신의 제고’- 과학기술의 제고와 인재육성을 통한 강대국화 전략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핵심 분야인 과학기술 개발과 교육시스템의 발전 및 체계적인 인재육성 제고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④‘도농 간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3농(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해결 최우선 과제로,<sup>18)</sup> 도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요소의 해결한다는 것으로 서부·중부·동북 지방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발전 추진, 지역 간의 생산요소와 자원의 이동 및 협력 증진 추진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농촌과의 균형을 위한 도시와 촉진으로 농촌수입의 증대 및 인프라투자(SOC)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⑤‘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인본주의적 차원에 입각하여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일반 대중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과 단결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취업기회의 확대, 사회보장체제의 확립, 소득분배구조 개선, 중산층의 확대, 최저임금의 인상 및 저소득층의 주거·의료·교육 지원 등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⑥‘개혁개방의 심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견지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원칙과 임무 그리고 목표로 나눠 도식화하면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관광, 교육, 문화 및 오락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 18) 2005년 3월 10일 정치협상회의 분임 토의에서 징첸쿠이(景天魁)의 『순조로운 소득분배관계를 위한 이익조정 메커니즘의 확립(理順收入分配關係建立利益協調機制)』에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1985년 이후 계속 심해져 2004년 6: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소득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1995년 0.389에서 2002년 0.435로 증가하여 국제적 경고 수위인 0.4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China Daily*, 2005년 3월 11일자. 이와 관련해 정치사회적 분석을 한 논문으로는 孫立平, “改革以來中國社會結構的變遷”, 『中國社會科學』, 1994年 第2期, p. 56; 中國戰略與管理研究會社會結構轉型課題組, “中國社會結構轉型的中近期趨勢與隱患”, 『戰略與管理』 1998年 第5期, p. 3.

[표-1] 11차 5개년 계획의 원칙과 임무 그리고 목표

	6가지의 필수원칙	7가지의 목표	7가지의 주요 임무	
경제성장	안정적 고도성장 성장방식의 전환 자주적 혁신능력의 제고	성장목표 (년8% 이상) 자원의 효율성 제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	성장동력개발	제약 극복
			산업구조의 조직화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지역간 협력 발전	자원 절약 환경 친화
사회 안정	도농 간의 협력발전 조화로운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생활여건의 개선 사회적 안정의 확보	사회주의 신농촌(新村) 실현 조화로운 사회 구현	
제도 개혁	개혁개방의 심화	개혁개방의 지속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11차 5개년 계획은 1978년부터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보다 구체화한 점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이 균형과 분배 그리고 효율 등을 중시한 것은 그간의 투자주도형의 성장우선 전략(연평균 9.4%의 고도성장)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과거 외자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국내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내수시장에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수출일변도의 성장전략에서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동반발전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출주도형의 발전 및 외자기업의 유치 정책에 크게 의존했던, 기존의 외연적 성장에서 나타난 한계를 인식함으로 성장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20%로 나타난 반면, 소비는 10%대에 머무르면서 투자와 소비 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80%를 넘어선 반면 내수시장 의존도는 54%에 불과해 개도국 평균치인 7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sup>19)</sup> 따라서 기존의 ‘고투입-고소모-고배

출-불현조-불순환-저효율'의 성장방식을 '절약발전-환경발전-안전발전-지속가능발전'으로 새롭게 제시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현재의 외연적(粗紡的) 성장방식을 내연적(集約的)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 증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는 소위 '내수주도형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및 '자주적 기술역량의 강화전략'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sup>20)</sup>

중국은 2005년에도 9.3%의 경제성장을 달성, 연평균 7~8%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도시화의 가속에 따른 제 3차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는 점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성장방식의 대폭적인 전환이 이뤄지면서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되어 산업기술혁신과 응용기술 보급을 핵심으로 한 산업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응용기술로 정보(IT)·바이오(BT)·의약·에너지 및 환경보호 기술 등의 공공기술과 기초기술의 적극적으로 발전 추진하겠다는 것(新型工業化道路=전통제조업+첨단제조업)이 금번 계획안의 내용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톈진을 중심으로 대련과 청도 등 연해개방도시를 주변으로 하는 환황해의 성장전략을 공표하였다. 이는 환황해 지역이 21세기 중국경제를 이끌 최대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였음을 반증하는 증거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환황해지역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19)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쟁위엔(張宇燕)은 1980~2001년까지 미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의 대외의존도가 14~20%에 안정적 수준을 보인데 반해,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이미 80%에 달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무역의 참여 정도가 부단히 증가하고 세계 경제의 일체화가 가속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나친 무역흑자가 오히려 국내 총수요의 부족을 부추기고 있음으로써 강대국 경제의 기준이 되는 주도적 국내소비의 수준(약 70% 정도)에 크게 밀돌고 있다고 판단(미국 78%, 일본 약 85%)하고 있다. [http://www.lnzw.gov.cn/document\\_show.asp?show\\_id=1246](http://www.lnzw.gov.cn/document_show.asp?show_id=1246) [2005, May 6]

20) 芮明杰, 『中國產業競爭力報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年; 鄭新立, 『21世紀初中國經濟』,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年; 李賢添, 『21世紀初中國的產業政策』,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05年.

21) 중국은 공업화 발전과정에서 아직 성숙단계가 아닌 성장단계에 있다. 제조업 생산총액은 3,825억 달러 미국의 22.3%(1조 7,111억 달러)이며 일본의 42.0%(9,111억 달러), 독일의 86.3%(443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외국자본과 기술 및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고도 성장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역대상국으로 수출액은 2005년 기준 전년 대비 30.6%가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4.4%가 증가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수출입액 중 랴오닝성과 허베이성, 그리고 산둥성 지역 간의 교역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의 수도권 지역과 중부권 소재 기업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아짐으로서 이들 기업의 대중국수출입유통경로를 개선시켜 물류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인접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도권 항만의 활용방안은 시의적 적실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기간항로상에 위치한 부산항과 광양항의 대중국 화물처리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기에 수도권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은 국내물류체계의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sup>22)</sup> 특히 평택항은 지정학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과는 달리 한국의 수도권과 중부권에 소재한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입관문으로서의 선호도가 높기에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입물류의 지원은 적잖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서해안을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개발 방안은 시의적 적실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전략과도 직간접적으로 연동된다고 하겠다.

2005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3.95억 TEU를 기록하였고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51%, 유럽이 18.6% 그리고 북미가 10.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물동량유치를 위한 각국의 물류 허브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물동량은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상해(2005년 기준 전년 대비 26.9% 증가), 선전(2005년 기준 전년 대비 35.9% 증가) 등 중국항만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환적화물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2005년간 한국 내,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 추이를 보면 인천항(연평균 9.35% 증가), 광양항(연평균 8.08% 증가), 부산항(연평균 7.03% 증가)씩 증가한 반면, 평택항은 연평균 23%(2003~2005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증가와 더불어 대중국 무역의존도의 증가를 반증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발전 전략으로 상당한 정책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인천공항의 2단계 확장과 연계교통망 확충,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선석 확충과 물류부지 확장 등이 있다. 하지만 평택항의 경우, 컨테이너 시설확보율(하역능력52.6%)과 투자실적(15.6%)은 비교대상인 광양항(83.5%)이나 부산신항(45.8%)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2)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항만의 경쟁성 및 보완성 분석 연구, 2006.

이렇듯 증가하는 한·중 양국 간의 교역에서 한국의 서해안 지역은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산둥성은 단위지역별로 볼 때, 수입규모 1위이고 수출규모 3위이며 총 교역액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환황해를 중심으로 한 거점지역의 협력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환황해권에 위치한 중국의 랴오닝성과 허베이성 그리고 산둥성의 중국 내 생산비중은 2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인구는 중국 전체의 14.7%, 3개 성의 GDP는 중국 전체의 22.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3)</sup> 이들 3개 성의 대한국 교역액[표-1]을 보면 환황해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표-2] 한국과 중국 주요지역간의 교역액

구분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한국	수출	19.1억 달러(2)	3.6억 달러(8)	87.4억 달러(1)
	수입	26.8억 달러(3)	10.9억 달러(2)	71.5억 달러(3)
총교역액		45.9억 달러(2)	14.5억 달러(*)	158.9억 달러(1)

주: 2006년 10월 현재; ()안의 수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에 있어 해당 지역의 순위, \*은 추정 불가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반면 교역액만을 가지고 구분할 때, 한국의 환황해 지역 출입구로 볼 수 있는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26.2%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인천은 18.3%, 서울은 19.9%로 나타났으며 수입액은 각각 17.1%, 14.8%, 22.1%를 보였다. 한국의 수도권은 해외교역 대상국 중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은 22%이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전체 교역액 비중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경기도 69%, 서울 29.4%, 인천 10.5%). 거점지역의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의 주요 거점교역지역이 한국의 수도권이라 볼 수 있다.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경기도 가장 많은데, 충남북 지역의 물동량을 포함하며 그 비중은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들어, 부산항을 통한 처리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종전의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환황해권역의 국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환황해 지역의 교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경기, 충남 등과 같은 환황해 인접 거점지역의 수출입 물량이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하

23)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의 관련 자료;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http://www.drc.gov.cn/>)의 관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의 관련 자료



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서울의 수출화물총량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비해 2005년에는 각각 4%와 5% 증가했다. 반면 종전에 수출화물총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각종 정책제한으로 충북과 충남은 각각 15%, 3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적 증가 결과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은 연평균 9.8%의 놀라운 경제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이미 1조5000억 달러를 초과했다는 점은 환황해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조건 역시 매우 성숙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은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 매력적인 지역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수도권을 포함하는 경기도 지역은 대중국 수출입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동시에 한·중 양국의 수출입의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기에 환황해 지역협력을 위한 지역협력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환황해 지역협력의 주요 거점지역으로서의 경기도가 인프라부문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내우 외박한 환경에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육성과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 IV. 결론

지역협력의 논의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유인되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평화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이 차원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문제는 탈냉전의 환경에서 아직도 냉전적 정서와 환경이 상존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 지역협력의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이 시대적 필요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지정학적 요인과 체제의 상이성 그리고 서로 다른 경제발전의 수준 등으로 인한 요인들이 국가차원에서의 지역협력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협력 논의는 점차 거점지역별 협력으로 그 논의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황해 지역협력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만 거점지역별 협력으로의 발전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으로 격상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은 총량적인 측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 모두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데, 이를 배경으로 한 양국 간의 지역협력 논의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지역의 협력은 시의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는 경제부문에 있어 양국 간의 인적 혹은 물적 교력(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는 지역협력의 논의를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환황해 지역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자체를 추동할 수 있는 지역협력협의체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교류의 핵심 거점 지역들 간의 협의체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파악된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의 경기도와 중국의 산둥성은 교역과 교류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긴밀도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도 적잖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 11차 5개년 계획과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의 부상을 희망하는 한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양국 간의 협력, 그리고 양국의 거점지역 간의 협력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는 양국에 있어서도 그리고 양국의 거점지역에 있어서도 상부상조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황해 지역협력체의 발전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단순한 의사진행과정이나 인식의 차원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협력체의 구성과 참여 그리고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약 확대된 지역협력체가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된다면 이는 평화와 발전을 만족시키는 국제환경의 확보뿐만이 아닌, 진정한 탈냉전적 환경의 조성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의 지역협력을 위한 거점지역협력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의 지역협력과 양국 간의 거점지역(지방자치단체)협력협의체는 경제발전을 전제로 구성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협력체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둘째, 양국의 지역협력과 양국 간의 거점지역협력협의체는 환황해권역의 주요 거점 지역인 한국의 경기도와 중국의 산둥성을 중심으로 거점지역의 협력을 추진하여 점(點)에서 선(線)으로 그리고 면(面)단위체로 그 협력의 범위를 넓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의 지역협력과 양국 간의 거점지역협력협의체는 공동의 이익과 자

국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의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협의체 내 공동기금(회)을 조성하여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양국의 지역협력과 양국 간의 거점지역협력협의체는 상호간의 쟁점과 분쟁 등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협력체의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양국의 지역협력과 양국 간의 거점지역협력협의체는 장기적이고 안정성 있는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적교류의 확대를 추진해야하며, 상호 간의 이해증진을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몇 가지 방안을 통해 환황해 지역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자치단체협의체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또한 협력의 장기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합의 하에 독립된 기금회의 결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빈번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의존도의 제고와 이해증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드웨어의 확충을 통한 관계의 긴밀도 제고 역시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는 상호신뢰의 기반이 기초하지 않는 전제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자치단체들 간의 유기적 협력도 필요하다. 중국은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계층적 명령체계가 확고하며 정책의 입안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 속도와 결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며 일관성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경쟁하는 입장인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기적 변화에 대처해야 하기에 정책의 일관성과 역사성이란 측면에서 비교적 취약하다.

환황해 지역협력의 의의는 경제적 이익을 통한 정치·안보 차원의 효익(效益)을 감안한 협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지만 광의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개입과 참여는 단지 시간이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하드웨어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가 내 지역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초국가적 지역협력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의 지역자치단체가 중앙과 지방관계로 분류되지만 초국가적 행위에 있어 중앙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11차 5개년 계획은 분산된 지역단위체의 발전 전략을 하나의 ‘조합’이란 방식으로 집중하여 고효율, 저비용의 시너지효과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의 유기적 협력을 모색하지 않는 한 환황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역협력의 논의는 단면적이고 개별적인 협력을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 참고문헌

전가림, 후진타오체제의 정치·경제·외교적 특징, 『동서연구』 제 18권 2호.

孫立平, “改革以來中國社會結構的變遷”, 『中國社會科學』, 1994年 第 2期.

芮明杰, 『中國產業競爭力報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年.

王濤, 孟小艷, 中韓自由貿易區的可能性與障礙分析, 『哈爾濱商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 2期 總第 93期,.

李淑娟, 論區域經濟一體化背景下的中韓合作, 『當代韓國』 2005年 春季號.

李賢汭, 『21世紀初中國的產業政策』,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05年.

鄭新立, 『21世紀初中國經濟』,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年.

中國戰略與管理研究會社會結構轉型課題組, “中國社會結構轉型的中近期趨勢與隱患”, 『戰略與管理』 1998年 第 5期.

馮昭奎, 建設東亞共同體的十大關鍵要素, 『外交評論』 2005年 8月 總第 83期.

Kenneth W. Dam, *The GAT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21 Century*, Random House, 1993.

Stephan Haggard, "Comment," in Jeffrey A. Frankel and Miles Kahler, *Regionalism and Rivalr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Pacific Asi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조선일보』

*China Daily*

[http://www.lnzw.gov.cn/document\\_show.asp?show\\_id=1246](http://www.lnzw.gov.cn/document_show.asp?show_id=1246)

IMF (<http://www.imf.org>)

일본은행 (<http://www.boj.or.jp/>)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 (<http://www.drc.gov.cn/>)

중국 인민은행 (<http://www.pbc.gov.cn/>)

중국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은행 (<http://www.bok.or.kr>)